

김 지사, 벤처생태계 조성 포럼 개최

전문가적 업무 역량강화 · 도정발전 방향 모색 도청 공연장서 박성진 포스코홀딩스 고문 특강

전북특별자치도는 벤처·창업생태계 조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도청 공연장에서 '4월 새로운 전북 포럼'을 개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실·국장, 팀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200여명과 함께 '벤처생태계와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주제로 공부하고 열린 토론회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포스코홀딩스 박성진 고문의 특강에 이어 토론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미래산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창업 및 벤처생태계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수한 벤처·창업 인프라를 보유하기 위한 노후를 지속적으로 쌓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잠재력있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북자치도에서는 1조원 규모의 모태기금(펀드)을 조성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육성 공간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에서 많은 청년들이 창업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 강사로 나선 박성진 고문

은 '벤처생태계와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주제로 열린 강의를 진행했다. 박 고문은 "벤처생태계는 신기술 연구 결과를 상용화하는 효율적인 틀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사업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며, "혁신의 원천은 기존의 기업이 아닌 신생 벤처기업으로, 스페이스X, 에어비앤비, 테슬라 등 기업은 모두 벤처로부터 나왔다"고 말했다. 박 고문은 이어 산학연 기반 벤처플랫폼을 통한 기업의 신사업 발굴, 지역중심의 창업생태계 정책과 사례를 소개했다. 더불어, "지역 우수대학 및 연구기관의 R&D 성과를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기업을 통해 벤처기업의 내실있는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인큐베이팅 센터 구축,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한편 박 고문은 전남 도내 창업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전북창업기관협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며, 포스코 창업생태계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 지역 창업생태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협력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매월 '새로운 전북 포럼'을 개최해 바이오, 신산업, 일자리·경제, 농생명, 문화·관광 기타 분야별 최신 이슈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토론회를 통해 직원들의 시야를 넓히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1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4월 새로운 전북 포럼'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박성진 포스코홀딩스 고문(사진 오른쪽)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기후변화주간 탄소중립 생활실천'

전북자치도, 22일 오후 8시 시·군과 청사 소등행사 추진

전북자치도가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도민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16회 기후변화주간인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청사 소등행사 및 사진 전시회, 온라인 이벤트 등 다채로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 기후변화주간이란 폭염, 폭우 등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 발생으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됨에 따라, 탄소중립 생활실천 유도를 목적으로 매년 4월 22일 지구의 날 전후로 환경부가 지정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도는 생활밀착형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보다 많은 도민이 직·간접적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도 및 14개 시·군은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일제히 청사 건물을 소등해 지구의 소중함을 느끼고, 탄소중립 실천을 다짐하는 소등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소등을 실행하면 된다. 아울러, 전주기상지청 및 전북지방환경청과 협조해 기후변화 사진 등을 전시하는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회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도청사 1층 로비에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 직원들은 오는 25일 구내식당에서 저탄소 식단으로 식사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 다짐에 동참한다. 도청 구내식당은 지난해 9월부터 월 1회 채식하는 날을 운영, 매일 마지막 목요일마다 락토오보(Lacto-ovo)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 참여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도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포인트 신규 가입 인증 온라인 이벤트 △탄소중립포인트 제 참여 라디오 캠페인 송출 △공동주택 등 승강기 내 홍보 스티커 부착 등이다. /김재훈 기자

도,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나선다

신혼부부·임산부·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직원 의견 수렴

전북자치도가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을 조성하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직원들의 행복이 곧 조직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신념 아래, 지난 2월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가족의날'과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심각한 인구 위기와 비혼, 결혼 후 무자녀 등 달라진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도는 행정이 앞장서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가족친화 직장환경을 조성해 저출산위기를 극복하고 조지 발전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 17일 1차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직원 간담회를 개최해 아이를 가진 직장인의 어려움을 듣고, 그들의 경험담을 정책에 담아낸다는 방침이다. 이어 오는 25일 2차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은 공공부처 민간부문까지 이어지는 가족친화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컨설팅·특례사업화 사례교육 실시

공유 통해 특례 이해도 제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도 특례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법 특례반영에 따른 특례실행 컨설팅과 자치입법 및 특례사업화 사례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올해 12월 27일 전부 개정법률이 시행 되기 전 131개 조문 333개 특례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특례를 구체화하여 사업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6일부터 진행된 컨설팅은 전북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인 민기 교수를 초빙하여 실국에서 추진한 전북연구원 박사들과 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와 함께 특례별 쟁점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민기 교수는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담당 직원들이 자치입법 및 특례사업화 사례교육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교수로 미국켄터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2017년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2023년 '제주특별법에 나타난 권한특례 유형 분석' 논문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논문학술상을 수

상하였다. 민 교수는 "특별자치도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의 이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며 "새만금 등 전북이 가진 우수한 자원으로 국내 타 지역과 차별점을 두고 새로운 상상력과 창의력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법이 특별한 이유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조례를 제정,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특례 권한의 성공적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개정 등 자치입법이 제대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운영에 참여했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례별 컨설팅 제안과 선행특별자치도의 특례 사업화 자치입법 정비 사례를 공유하여 공무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며 큰 호응을 받았다. /김재훈 기자

전북선관위, 정치자금 조사반 총선 선거비용 집중 조사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22일부터 전북선관위 및 구·시·군선관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수입·지출내역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